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으로 입장 밝힌 유족들

“정부, 진정한 사과·책임 규명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한 유가족은 이태원 참사가 “안전불감증에 의한 간접살인이었다”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2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중 일부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심경을 밝혔다.

외국 국적인 A씨의 어머니는 아들 A씨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

의 사망증명서를 들여 보이며 “사인도 시간도 장소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떠나 보내려 하나”라며 “심폐소생술이라도 받았는지 병원 이송 중 사망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더 안아주고 더 토닥여줄 걸,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줄 걸, 얼굴 한 번 더 만져줄 걸, 먼저 보낸 미안함에 톰부림친다”며 “단속번호 3번에 저장된 우리 아들 목소리를 이제 들을 수 없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 지원·추모시설 마련 등 요구 전달 한 유족 “위패 없던 분향소가 2차 가해”

국내 대학 어학당에 공부를 하러 왔다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됐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를 보내며 가장 힘든 건 나라를 이끄는 분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말 답답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나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 곧(오스트리아) 빈으로 간다. 정부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아들 장례식이 반에서 28일에 열려야 한다”며 “억울하게 죽은 외국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유가족 여러분도 힘내서 꼭 우리 아이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C씨의 아버지는 “이태원 참사는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간접살인이었다”며 “이태원 도로 한복판 차디찬 죽음의 현장에는 국가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참사로 희생된 배우 고(故) 이지한씨의 어머니도 이날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드라마 방영을 앞두고 매일 같이 인동을 거르지 않았고 작품에 온 신경을 썼다. 오후 2시에 바지를 디러 입으면서 나 오늘 밥 먹고 올 거야(하고 나갔다) 그런데 아이가 그날 죽었다고(연락이 와서) 믿을 수 없어서 병원을 갔는데 지한이가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이 패어 있었고 배가 훌쩍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해서 지한아 너 오늘도 못 먹었구나(라고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다”며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경찰청장, 서울시장,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자녀 한 명이라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면 과연 그 거리를 설렁탕을 먹고 어슬렁 걸어갈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10·29 참사 대응 TF 팀장 윤복남 변호사는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선제조치가 없다 보니 사적으로(명단) 공개되는 형태”라며 정부의 조치 미비를 지적했다.

그는 “명단 공개가 잘못됐는지 말았는지 가해가 아니고 정부가 희생자 추모를 위해 공개하려는데 동의하는지 묻고 공개하면 될 일인데(본질) 호도되고 있다”며 “동의 하에) 명단을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 유가족은 “동의 없는 명단공개는 2차 가해라고 했다. 그전에 저의 동의 없이 분향소에 영정이 없고 위패가 없는 것을 본 것도 2차 가해였다”며 “그런 분향소를 본 적 있는 나”며 되물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진정한 사과 △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추모시설 마련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헤밀턴호텔 옆 골목 119-7번지 일대에서 발생했다. 많은 인파가 좁은 골목길에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고 이날 현재 158명이 숨졌다

/뉴스시스

염영선 전북도의원 도의회 대변인 선임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초대 대변인에 염영선(정읍2, 더불어민주당)을 선임했다.

도의회는 이달 초 전라북도의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대변인을 임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변인은 전북도의회 주요 시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언론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주요 현안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 등의 직무를 하게 된다.

도의회 대변인은 의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2년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도의회 의정활동을 더 많은 도민과 공유하고 더 활발하게 소통하기 위해 대변인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주요 의정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활성화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스마트그린 시범산단 지정 등 올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우수사례로는 최종 10건이 선정됐으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단지 지정, 국제투자진흥지구 국경과제 포함,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도개선’ 등이 꼽혔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청 내부 공모 및 적극행정 누리집(적극행정 온)을 통해 총 15건이 접수됐으며 ‘과제의 중요도, 담당자의 적극성, 국민체감도’ 등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 국민 모니터링단 심사,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이 새만금개발청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고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임실군의회 정례회 개최 내년 예산안 등 심사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심인 임실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24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다음달 19일까지 29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를 구성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또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지난 1년간 임실군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적정성 여부를 감사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하여, 동의안 3건, 2023년 정기본 공역재 관리계획안 1건, 의견취합안 1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세부일정은 21일 제차 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23일부터 12월 1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2월 5일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에 대한 의결 후 폐회할 예정이다.

/임실=김토영기자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

“새만금 잼버리 성공 위한 준비 부족”

강태창 도의원, “주무부처 폐기 예정, 폭염 등 대비 불충분
전 세계에 정복 홍보, 도내 청소년 키울 기회… 준비 만전을”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군산1)이 지난 21일 제32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점검을 촉구했다.

강태창 의원은 잼버리 대회의 콘트롤타워인 여성가족부가 폐지 예정이고 우리나라의 고온다습한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참가자들이 폭염·폭

우·곤충·감염병·비산먼지 등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14개 시군 연계 영의 프로그램이 단순 등반 트래킹 등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중복되어 있으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이 부재하다고 질타했다.

강태창 의원은 “잼버리 대회는 전 세계에 전복을 홍보하고 도내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키울 중요한 기회이다”며 “전라북도가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를”

김이재 도의원, “올해 위험군 진단 청소년 전년보다 늘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저연령화 뚜렷… 대책 마련 시급”

우리나라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지난 21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여성가족부가 전국 학령 전반기 청소년(초 4, 중 1, 고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127만명 중 23만

5,687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6,796명 증가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진 청소년(중복위험군)은 8만1,233명으로 전년 대비 4,24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 청소년 5명중 1명꼴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인터넷에 중독되는 연령 또한 저연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이재 의원은 또,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곳이 바로 학교인데, 관련예산과 예방교육실적은 저조하며,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관련예산 확보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11월 에너지 절약의 달... 유공자 업적 기리다

‘2022 전북 에너지 대상’ 개최
청목건설 대표 등 도지사 표창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함께 전주 리우체 블랙라벨 폴리스홀에서 2022년 전라북도 에너지 대상 시상식을 22일 개최했다.

전라북도 에너지 대상은 매년 11월 에너지절약의 달을 맞아 관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한 지역 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이번 시상식에는 전라북도지사 표창 7점,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표창 6점이 개인과 기관에게 수여됐다.

전북도지사 표창에는 청목건설(주) 박형식 대표이사, 한국그린에너지(주) 신동찬 대표이사, (주)케이씨씨실리콘 김봉석 부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명근 대리, SCD에너지(주) 배희종 대리, (주)해동이앤씨 엄성열 상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관으로는 지역 내 ESG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에너지 효율향상에 기여한 한국전기인전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는 전북도와 함께 전주 리우체 블랙라벨 폴리스홀에서 2022년 전라북도 에너지 대상 시상식을 22일 개최했다.

장 직무대행 오치영)가 수상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표창에는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박경수 사무처장 주식회사 예담엔지니어링 김창관 대표이사, 유한회사 네온 양정렬 대표이사, 주식회사 새론 윤희정 대표이사, 한국미우리공업(주) 조인종 과장, 전북연구원 박세현 연구원이 수상했다.

/김영태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 김일수 본부장은 “우리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유공자들을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전북도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는 지역 에너지의 효율향상과 친환경인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전북환경청, 내일 평가업체 관계자 대상 온라인 교육·간담회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은경)은 환경영향평가 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4일 전북지역 내 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들과 온라인 교육·간담회 개최 계획을 22일 알렸다.

환경영향평가업체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전문업체로 전북지역 내 등록업체는 모두 17개소이다.

전북환경청은 전북지역 내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 매년 ‘환경영향평가업체 대상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해 관계자 역량을 강화하고 평가제도 내실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교육 및 간담회는 지난 9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방법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통해 환경영

향평가 관계자 역량을 제고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한다.

평가제도 전반에 걸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전국환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업체, 승인기관, 전문검토키관’ 등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평가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태기자